

## 아침세평

## 김홍석

G-Kunst연구소장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사회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과 메가시티 전략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통합의 가장 강력한 내적 동력이자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단연 ‘문화예술’이다.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이 거대한 공동체는 행정 장벽을 허무는 순간,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문화 엔진으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여건과 부정적 우려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유럽의 선진 사례는 행정 경계를 초월한 연대가 도·농 복합 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좋은 지표로 보여 주고있다. 독일의 루르(Ruhr) 지역은 과거 탄광촌이었던 농촌과 중도시들이 ‘루르 2010’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문화 그물망을 형성했다. 이는 특정 대도시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산업 유산을 예술적 자산으로 탈바꿈시킨 모델로, 우리에게 ‘네트워크형 문화 생태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프랑스의 메트로폴(Metropole) 정책 또한 도시의 고급 인프라를 주변 농촌으로 확산시키고 농촌의 전통 자산을

## 남도 문화예술의 ‘초광역 르네상스’를 향한 여정

도시의 창의성과 결합하는 상시적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극복해 왔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 역시 이러한 초광역적 상생의 틀 안에서 남도의 정체성을 재검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행정통합이 실현될 때 기대되는 가장 큰 긍정적 여건은 ‘남도 문화권 거주권’의 형성과 그로 인한 활동 외연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광주의 공연을 전남도민이 관람하거나 전남의 축제에 광주 시민이 방문하는 수준의 단절된 소비에 그쳤으나, 통합 후에는 활동의 물리적·심리적 경계가 사라질 것이다. 광주의 풍부한 기획 인력과 청년 예술가들이 전남의 빈집이나 폐교를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전남의 전통 장인들이 광주의 첨단 미디어아트 기술과 협업하는 ‘영감의 확장’이 상시화될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중복되었던 유사 축제와 공모 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320만여명의 시·도민을 단일한 문화 향유층으로 확보해 예술가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정적 여건과 위험 요소도 명확하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인프라와 자본이 집중된 광주 대도시권으로 모든 문화 역량이 쏠리는 ‘문화적 빨대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전남의 소규모 농어촌 지역은 문화적 자생력을 잃고 도시의 배후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지원 체계와 보조금 기준을 가진 두 지자체가 하나로 합쳐질 때, 기존 혜택의 축소를 우려하는 예술인들의 갈등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기초 단위에서 유지돼 온 소박한 풀뿌리 문화 활동들이 거대 담론과 대형 프로젝트에 밀려 예산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경우, 남도 문화의 근간인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통합 문화 시대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적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먼저 통합 문화재단을 구축하되 광주는 ‘글로벌 마케팅과 기술 융합’에, 전남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과 전통 자산 현대화’에 집중하는 전략적 분업을 명문화하는 권역별 특화 지원 체계를 제시해 본다. 이와 함께 통합 문화 바우처를 도입하고 대중교통망과 연계한 ‘문화 셔틀’을 운영해 농어촌 주민들의 접근성을 물리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형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농어촌 마을 단위의 소규모 창작 활동에 대한 예산 쿼터제를 운영해, 거대 행정 조직 내에서도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사료된다.

최근 행정통합 문화·관광분야 시민 공청회에서 대두됐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활용 문제, 문예진흥기금 조성 및 문화예술인 장·제작지원, 창작공간, 관광의 접근성까지 이를 실행하는 실행력까지 총괄적 검토와 재정립이 필요하다.

유럽의 사례가 증명하듯 행정의 통합은 곧 ‘시장의 통합’이자 ‘남도다움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수도권 중심의 문화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강력한 자생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통합은 단순한 지리적 합병을 넘어 도시의 세련미와 농어촌의 투박한 진정성이 만나 새로운 남도의 색깔을 창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제 소모적인 예산 논쟁을 넘어 남도의 예술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내기 위한 담대한 설계를 시작해야 할 때다.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그릇 위에 남도의 고유한 예술적 혼을 담아.

## 기고

## 정성욱

목포농협 융해지점장



“농협이 진짜 문제예요. 맨날 구속되고 수사하고 난리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책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12일간 생중계한 업무 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과정 중 나온 이 한마디는 농협이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농협을 바라보는 인식이 절제 담겨 있었다. 단순한 추종적 발언이 아니라, 반박된 뉴스와 사건, 그리고 누적된 실망이 만들어낸 인식의 단면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평가의 대상이 내가 30년 넘게 몸담아 온 조직이라는 사실은, 농협인으로서 쉽게 넘길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농촌에서 나고 자랐다. 농업인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은 자연과의 싸움 속에서도 함께 버티는 공동체의 힘이었다. 농번기에는 자급 격정을 털어주고, 어려운 시기에는 가장 먼저 손을 내밀던 존재가 농협이었다. 그런 경험이나를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의 길로 이끌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농협인’,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린다. 조합원과 함께 웃고 울며, 농업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지탱해 주고 있다는 자부심은 여전히 나를 이 자리에서 있게 하는 힘이다.

## 농촌 마지막 버팀목, 농협을 다시 생각하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은 늘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때로는 농업과 농촌의 모든 문제가 농협에 기인한 것처럼 비취질 때도 있다. 물론 농협 내부의 문제와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부 임직원의 일탈, 권한의 집중, 시대 변화에 뒤처진 의사결정 구조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하고, 고쳐져야 할 과제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다. 이 법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뿐 아니라, 농협을 이용하는 소비자, 더 나아가 농협의 구성원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개정돼 왔다.

농협의 구조와 권한, 역할은 이미 법과 제도 속에서 규정돼 있음에도, 정작 그 제도 자체에 대한 성찰과 책임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농협은 늘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법·제도와 정책은 상대적으로 논의의 외곽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위기’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농업이 ‘미래가 없는 산업’으로 인식되는 현실 속에서,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나 유통조직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필자도 이제 농협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해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은 ‘이 결정이 조합원의 삶에 어떤 힘이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잃는 순간, 농협은 존재 기반을 잃는다.

둘째, 투명성과 책임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작은 일탈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했다.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고, 잘못 앞에서 가장 먼저 고개 숙일 수 있을 때에만 농협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청년 농업인과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이 다시 ‘꿈이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농촌의 내일은 없다. 금융과 유통,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농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할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다시 설 수 있다.

넷째, 중앙과 지역, 조직과 현장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회의실의 판단보다 들뜬 목소리가 우선돼야 한다. 현장의 절박함이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투명한 국정 운영’과 ‘현장의 목소리’는 농협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가치다. 농협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혁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국민의 시선도 서서히 달라질 것이다.

31년 동안 농협인으로 살아오며 나는 수많은 변화의 순간을 지켜봤다. 때로는 비판이 아프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묵묵히 담을 지키는 조합원들이 있었고, 이를 얹어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농협은 지금까지 버텼고, 그렇기에 나는 단언할 수 있다. 농협은 아직 희망적이고, 농협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서는 순간,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역시 다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설 것이라 믿는다.

최대 변수는 교통이다. 광천터미널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병목이 심하다. 광주시는 무전대로와 터미널을 잇는 길이 187m, 폭 12m의 양방향 2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해 고속·시외버스를 지하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내버스 정류장 중앙차로 이전, 택시 승하차장과 픽업존을 겸한 내부 통과도로 개설도 추진한다.

교통대책이 ‘완화’에 그칠지, 시민이 제감하는 ‘해결’로 이어질지는 교통영향평가와 후속 설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시철도 상무광전선도 주목된다. 광주신세계는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민간개발과 도시철도 확장을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올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고, 연말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5월에는 3조원 투자 계획 실현을 위한 MOU도 체결한다. 공공기여가 실질적인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지고, 혼잡 해소 대책이 성과로 증명되는 복합개발이 되길 기대한다.

## 사설

## 광주 ‘송정역 폐 유흥가’의 변신, 성공하길

20여 년간 방치돼 있던 광주 송정역 인근 폐유흥가가 마침내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된다고 한다. 광주 광산구가 광주 관문의 첫인상을 훼손해 온 이른바 ‘송정리 1003번지’ 일대 정비사업을 공공 주도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비 대상지는 광주송정역 건너편에 위치한 노후 유흥업소 건축물 11개 동이다.

광산구는 총 66억원을 투입, 이달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가 오는 2029년 12월까지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900㎡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 35면과 585㎡ 규모의 찜시မ်터를 조성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 관문에 걸맞은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 회복을 위해 큰 도로 주변 어두운 구간에는 야간 조명 설치와 작품 전시를 통해 밝은 거리 조성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한다.

정비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데 우선 방치된 폐건물을 철거해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기로 했다. 이후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해 늘어나는 송정역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흡수하고, 시민이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철거한 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주간에는 주차장으로 운영하되, 야간·주말에는 청년과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포장마차와 오픈 마켓을 열어 문화·상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사실 이 일대는 1950년대 송정역 형성 때 유흥업소들이 모여 들던 광주 지역 대표적인 유흥가였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업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됐고, 2005년 대형화재 사고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쇠퇴해 장기간 슬립화된 상태로 방치돼 왔고 안전·미관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등 환경 개선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상가 소유주 참여 등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되지 않아 무산돼 왔다.

최근에는 광산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일부 토지가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 대상지로 포함됐지만 대다수 유흥업소 상가는 여전히 제외됐다.

이처럼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지역난제를 자치단체가 주도해 선제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전남 공보의 점점 줄어드는데…대책 ‘요원’

농어촌 의료의 ‘최후보루’인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가 매년 급감, 아니 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보의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의료취약지 전남의 우려 또한 점점 커 가고 있다.

1979년부터 배치기 시작된 공보의는 그동안 보건기관과 취약지 병원 응급실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전남은 섬·오지 등 의료취약지 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전체 공보의의 20% 가까이가 집중 배치돼 있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전남도내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수는 474명이나 됐다. 그런 공보의 수가 2015년 368명, 2020년 33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그 추세가 더 가파라져 2022년 303명, 2023년 267명, 2024년 229명, 지난해에는 179명까지 내려왔다. 15년 전과 비교해 62.2%나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4월이면 전남도내 전체 공보의의 33.5%인 60명의 병역 대체 복무가 끝나는 데 이를 대체할 신규 충원이 제대로 될 지 미지수라는 데 있다. 실제 전남의 경우 지난 2023년 95명 전역에 총원 59명으로 36명 이 미충원됐고 2024년 72명 전역에 총원 34명, 미충원 38명, 지난해 76명 전역에 총원 26명 미충원 50명 등 신규 충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의과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18개월인 현역병보다 2배 이상 긴 37개월이나 되는 복무기간과 지난 2024년 의정 갈등 심화로 의대생 상당수가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뜰이나 공보의가 없어 현재 도내 보건지소 216개소 중 60%가까운 126곳이나 순환 진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이에 대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비대면 진료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의 제도개선과 국립 전남의대 설립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취재수첩

## 본궤도 오른 터미널 복합화사업

## 이승홍

경제부 부장



광주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이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지난 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차원에서 조건부 동의를 얻어 (주)광주신세계와 사전협상을 완료했다. 이번 자문 통과로 광주신세계가 제출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계획안’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사업은 터미널 정비를 넘어 호남권 교통 관문을 ‘직주락 콤팩트시티’로 전환하는 복합개발이다. 터미널 기능은 지하로 내리고, 지상에는 백화점 확장과 호

텔·문화·업무시설을 올린다. 주거·의료·교육 기능도 함께 담겼다.

핵심은 공공기여다. 협상 결과 공공기여는 총 1497억원으로, 감정평가 기준 토지가치 상승분 3302억원의 45.34%에 해당한다. 현물 129억원, 현금 1368억원으로 이행하며, 당초 제안(828억원)보다 1.8배 늘었다. 다만 규모만큼 중요한 것은 배분이다. 공공기여가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에는 백화점 신관과 대규모 쉼터광장, 650석 가변형 공연장, 200여실 규모의 5성급 호텔, 180m 전망대가 포함됐다. 컨퍼런스룸과 ‘포레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 마이스(MICE) 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종합병원과 건강증진센터, 직업 양로시설, 국제학교, 인공 지능 교육기관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b>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b>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월 실 370-7000		370-7000	
산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370-7070	
문 헌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370-7080	
사 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